

|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_ 언론 편 |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좌담 개요

- **일시** 2019년 12월 19일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1
- **참석**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 **사회** 김양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장
- **배석**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내홍보 전문위원
최선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김양수 언론은 모든 경제사회 과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넘어, 국민을 대신 하여 크고 작은 과제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대안적 정론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언론에서 바라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신 노사정위원회 포함)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사회적 대화의 운영 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좋은 자양분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대답의 소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론이 바라보는 1기 경제사회노동위



원회에 대한 다양한 평가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국민연금·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의제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사회적 대화의 제약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과잉 정치화, 대표성, 합의와 협의의 딜레마 등이 있겠지요. 둘째는 이런 측면에서 남은 임기 또는 다음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야할 길을 짚어 보는 것입니다. 연말에 바쁘게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론사에서 내공이 깊은 논설위원들을 모신만큼 날카로운 비판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신연수 위원님은 경사노위 1기에 참여했고 이창곤 원장님과 이왕구 논설위원께서는 경사노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1기 경사노위에 대한 평가를 논의하고 둘째로 경사노위 2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기에 대한 기대나 방향, 사회적 대화가 가야할 길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기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회의체제가 작년 1월부터 11월

까지 진행을 해왔고, 여기서 개편방향과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범했습니다. 탄력근로제라든지 국민연금, ILO 핵심협약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을 둘러싸고 본위원회가 2~4차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올해 9월에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10월에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습니다.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경사노위 운영에 관해서, 특히 1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기 사회적 대화, 좋은 점수 주기는 어렵다

이창곤 언론에서 바라보는 경사노위 평가는 각 언론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지만 공통적인 인식과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가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민주노총 불참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대표의 참여 등 새롭게 틀을 구성하고 이름도 경사노위로 바꾸어 출범하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컸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직접 참여를 한데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단순 논의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여기겠다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비해 현실에서는 1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나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표류와 파행의 연속이었고, 결과 또한 미미했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님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 보였지 않나 싶습니다. <한겨레> 논설위원으로서 저와 한 인터뷰에서 문 위원장께서는 당시 ‘기다림의 1년, 애태움의 1년, 분노의 3개월’이라고 말했어요. 사회적 대화가 기능부전과 결정불능 상태에 빠져있었던 상황에 한 인터뷰였으니 아마도 위원장의 감정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일 테지만 실제로도 1기 사회적 대화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결과와 과정,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참여자와 관계자 등의 여러 힘든 노력이 있었지만 평가는 냉정해야 새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수우미양가로 따지면 양, 가 정

도고 구체적인 점수를 말하라면 50점에서 30점 사이, 그러니까 한 40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구 처음부터 세계 나가시네요. (웃음)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발전하면서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양대 노총 대공장 노동자 위주라는 부분을 극복하고 새롭게 대화해보자, 그래서 미조직, 소외계층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힘을 실어주셨고 양 노총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결국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게 한계가 된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못 들어오는 게 상수라 할지라도 운영 면에서 이걸 이런 단체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핵심이었던 소수 대표자들을 끌어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게 아쉽고요.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

어쨌든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못 한 게 구조적인 한계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처음 기대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해졌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탄력근로제라는 핫이슈가 들어가면서 처음에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기도 했고, 조금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달까. 말하자면 운영의 부분일 텐데, 한국노총과 함께 조금 더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게 결과적으로 기대에 비해서는 못 미쳤다는 거죠. 점수를 주자면 ‘수’나 ‘우’는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연수 저도 비슷한 평가인데요. 민주노총이 1999년 탈퇴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노사정위 구조를 경사노위로 바꾸는 것이나 탄력근로제 합의 등에서 상당히 기대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합의도 하고 잘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파행이 됐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당사자로서 책

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론인으로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10점 만점 이면 4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언론인들은 대체로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다만 더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서 4점을 주는 것으로 하지요.

이왕구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쨌든 계층별 위원들이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봤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월에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거의 다 된 것처럼 비쳐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긴 했지만 대통령 참석까지 예정되었는데 이렇게 어그러진 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였던 것 같아요.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조급하게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나, 또한 초기 운영 과정에서 성과주의로 갔던 것이 아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사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김양수 처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때 저희 위원회나 참여했던 노사정 당사자들이나 노동계 계층 대표들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탄력근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때 대책을 세우려고,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 늦어버린 거죠.

이창곤 계층별 대표의 참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특징짓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경사노위나 정부 스스로 기존 노사정위의 대표성을 확 넓힌 요소라며 자평했던 부분이이예요.

신연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도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김양수 계층별 대표들도 그렇지만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노총하고도 얘길 했고 한국노총하고도 만났고, 많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단체 중에서 누굴 어떻게 꾸릴 건가의 문제로 당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창곤 평가를 할 때는 왜 파행과 표류를 했는지, 또 성적이 좋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여러 선수, 즉 플레이어들이 참여합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이념과 기반 그리고 힘이 다른 플레이어들이죠. 역할과 비중에서도 차이가 있겠고, 그러니 책임 소재에서도 비중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플레이어들의 책임을 놓고 정확히 따져봐야죠. 아예 민주노총의 불참, 한국노총의 선택, 계층별 대표들의 거부, 사용자단체들의 어깃장, 정부의 오락가락 신뢰받지 못한 노동정책, 입법 보다 정쟁에 몰두한 국회 그리고 경산노위의 운영 미숙 등... 과연 파행과 표류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 이렇듯 책임의 비중은 달라도 1기 경산노위는 이들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경산노위는 스스로 운영과 대처가 적절했는가라는 충분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2기 경산노위가 이런 성찰과 교훈의 바탕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이어가고 그리하여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신연수 맞아요. 그게 특수한 경우거나 안이했다거나 대비를 못 했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노와 노, 그리고 노와 사, 정부 간 사회적 대화에서의 신뢰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멤버를 바꿔가지고 일단 2기를 출범 시켰는데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이창곤 각각의 플레이어의 문제점들이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마주침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적절한 기회를 놓쳤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 조건을 충분히 적절한 기회에 제대로 포착을 못했고, 결국엔 민주노총의 불참이라는 결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자기 성찰이나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책임이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경산노위까지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전체 당사자의 시선과 수준, 실력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과라고 해야죠.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선정, 어떻게 할 것인가

김양수 일단 1기 경사노위에서는 구체적인 의제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합의를 한 바가 있고, 산업안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탄력근로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대화의 과정에서 파행이 벌어졌고 그게 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또 계층 대표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로 넘어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는 의제 선정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아닙니다. 주52시간제가 법제화되면서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탄근제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이 직접 경사노위에 요청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기간과 남용 방지 대책을 주문 받은 것이어서 의제화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의제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더불어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선정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구 크게 조망하자면 탄근제 자체가 비록 경사노위 출범 단계에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의제였지만 작은 의제였다고 봐요. 경사노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미시적인 의제였는데, 이게 어쨌든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던져진 거잖아요. 주52시간 상한제가 워낙 격론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경사노위에 던져진 불가피한 측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남았죠. 대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해가 엇갈리는 이런 의제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의제를 맡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정치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곤 이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1기 경사노위가 꼬이게 된 데는 탄근제란 의제가 큰 요인이었습니다. 초기 산업안전이라든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의제별 위원회가 가동될 때만해도 경사노위의 출발은 비교적 순항의 분위기였죠. 그런데 탄근제가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꼬이게 된 거죠. 사회적 대화 의제는 본디 노사정 당사자의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제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테지요. 탄근제의 경우, 최종 선택은 내부에서 했다고 하지만, 경로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죠.

사실 경사노위의 입장에서 외부에서 의제가 제시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외부의 강압이나 요청 등에 따른 의제 결정 방식과 선택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부, 이번엔 국회였죠. 탄근제를 둘러싸고는 사안의 비중과 영향을 떠나 기본적으로 노사정 간의 특히 노사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국회나 여야 등에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가 없을 수가 없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힘들이 의제를 둘러싸고 작용하는 만큼 의제 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겠지요. 아무튼 2기 경사노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세종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한 가지 짚고 가자면, 탄력적근로시간제 의제를 국회가 요청했다고 저희가 무조건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52시간 상한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탄근제를 여야가 합의하고 당정이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에 의제

화를 요청한 것이고, 노사가 주도적으로, 특히 한국노총이 상당한 고민 끝에 의제로 받는 것이 국회로 그냥 넘기는 것보다 낫겠다는 결단에 의해 의제화가 된 것이 팩트입니다. 그 시점이 1차 본위원회였고 당시에는 계층별 대표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창곤 노사, 특히 한국노총이 받았다는 건 팩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탄근제를 의제로 삼은 것은 노사라고 하거나 노사가 받아서 의제가 됐다고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정 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연수 제가 본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아는데,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하는데 무슨 의제를 다룰 것인지 사전에 논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제를 올리고 의제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가서 정신없이 통과시킨 거죠. 공식 회의가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의제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해요. 그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죠. 그러나 탄근제를 의제화 하는 것 자체는 미리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이창곤 : 이처럼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시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생각은 당시에 탄근제가 이대로 통과할 경우, 가장 타격받는 건 대기업 노동자가 아니라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이니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노총 위원장은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아마 이 일로 나중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무튼 2기 경사노위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외부의 의제가 들어올 때는 노사정이 충분히 숙고해서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연수 나중에 결국 그렇게 얘기했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탄근제 자체는 노동현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주 52시간제도 교대제를 하면 되지, 탄근제를 사용하는 업체 자체가 별로 없고, 계층별 위원들도 합의한 내용 자체는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작년 11월에 본위원회가 처음 출범을 했는데 의제 설정 등에 대해 충분한 신뢰나 서로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탄근제가 와 버리니까 별 게 아닌 걸 가지고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가피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불가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제를 정할 때 주어졌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사노위가 중심을 잡고 이걸 우리가 하고, 이걸 협의 기구로 남겨 놓고, 이걸 국회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의제를 이 안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론적이지만 앞으로 노사정이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구 당시에 탄근제가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쪽이 어딘 지 모르겠으나 급한 의제라고 생각했고 너무 밀어붙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어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김양수 그때는 주52시간제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많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숨통을 터줘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탄근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는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 대표들이나 본위원회 위원들과도 좀 더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연수 계층별 위원들은 본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 등 하부 단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앞으로 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김양수 탄근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는 상황이었고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선은 아니지만 국회에 가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참여했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권과 임금 저하 방지대책 등 최선을 다했기에 차선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계층 위원들께서 여기에 불참하는 사이에서 진영논리도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곤 진영논리라고 표현하는데 진영논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

가 있다고 봅니다.

이세종 탄력근로제가 합의된 이후에 본위원회의 파행이 시작될 무렵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용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반대가 아니라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마치 정부가 기존의 노동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유연화 정책의 대표적인 것처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입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진영논리로 반대했다는 거죠.

이창곤 진영논리에서 진영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세종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의 측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왜 3개월에서 6개월 바꾸느냐, 또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고 프레임으로 반대하다보니 여기서 합의 주체와 외부의 반대하는 분들과 굉장히 괴리가 컸다는 거죠.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하나로 딱 규정해놓은 거죠.

신연수 : 저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계층별 위원들이 서너 번을 회의에 불참해 결국 경사노위가 파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유가 계속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어서 우리는 불참한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대표하는 단체들은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탄력근로제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러면서 불참하는 건 진영논리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보호권도 받아냈으면서 노동자한테 불리한 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협상을 할 수가 없지요. 다른 나라도 다 실시하는 탄력근로제를 대표가 가서 합의했는데 대의원 회의에 가니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 노동자단체 대표를 참여시킬 수가 없지요. 그리고 대표들도 그 만큼 역할을 못 한 거예요. 자기 대의원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을 해야죠.

이왕구 저는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이 많이 커지면서 한국노총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대의원 대화를 열기 직전 김주영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국노총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민주노총만 챙긴다고 섭섭해 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굉장히 긴장 관계였는데, 결국 김명환 위원장이 대화 판에 못 들어오게 되면서 조직의 논리에 따라가야 하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 비판의 각을 더 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기폭제가 되어 탄력근로제에 대한 반대를 통해 드러났다고 해야 하나, 민주노총이 굉장히 세게 반대했죠.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게 반발이 나온 게 양쪽의 갈등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창곤 우리가 바른 성찰과 평가를 하려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 대신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진영논리라고 하고, 그게 노동자의 진영과 자본가의 진영을 가리키면 이게 성찰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각 진영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논리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탄력근로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보완대책으로 제기된 거죠. 그것은 노동의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본의 의제입니다. 사회적으로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란 고질병을 푸는 중요한 정책이죠. 사실은 이 문제의 출발 자체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됐지 않습니까?



이창곤 한겨레신문 경제사회연구원장

이걸 이제는 진짜 법대로 바로잡겠다는 게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인데, 이 과제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이 겪을 어려움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그 보완대

책으로 탄근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11시간의 휴식시간 보장 등 안전을 위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부분만으로 충분히 보완되는 건 아니며, 문제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런 불신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계층별 대표의 선택은 실은 그들 개개인의 입장보다도 민주노총의 입장 등 노동계의 입장과 무관할 수가 없지요.

의제화는 선택과 집중 필요

김양수 여러 아쉬운 측면 있는데 사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산업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조건을 걸었고, 산업안전위원회에서도 과로사 방지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노사정 합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다 담지 못한 추가적 논의가 근로자대표제 같은 경우인데 지금 2기에서 시작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근제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이 꼬이게 했는지 복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면을 주의해서 보완해 가야할 지 생각하게 해준 의제가 탄근제 논의과정에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탄근제는 이정도로 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위원회로 요청이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매머드급 의제입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주제였는데,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했습니다. 최종합의는 안 됐고 가안, 나안, 다안 해서 3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하고 보험요율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사각지대 해소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의 문제나 공론화 과정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큰 의제를 1년만 논의하는 게 맞나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많은 논의과정이 있어서 이 정도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창곤 국민연금에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이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적 대화로 풀기가 쉽지 않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꼬끼리 중에서도 큰 꼬끼리입니다. 어디로든 옮기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 대타협으로 풀어야 후유증도 덜하고 합의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 가능한 사안이기엔 경사노위에 의제로 들어왔지만, 문제는 의제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과 경사노위의 의제로 삼는 것과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선 탄근제 논의 등으로 언제든 격돌할 수 있고, 여러 의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런 상황에 여러 의제 중 하나라도 국민연금이 경사노위란 틀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가라는 질문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 점에서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한 게 적절했건가에 의문을 가집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지만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의 틀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경사노위를 기반으로 하되 대통령이 그 틀을 바탕으로 하는 더 큰 논의와 결정을 하는 식이라든가.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중심론과 재정 안정 중심론이란 서로 다른 입장 간의 대립에 기초한 해묵은 갈등이슈입니다. 마주 달리는 기차 같은 이 두 정책 프레임의 충돌이 있지요. 충돌이라기보다 두 프레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다른 쪽을 향해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쪽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주창하는 마당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사회적 대화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는 노후 불평등 해소는 물론 노후소득 보장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차원에서 핵심 이슈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지만 조금하게 결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대한 과제죠.



정부가 이와 관련해 노후소득 보장과 세금인상, 재정안정 등을 놓고 한 가지 안을 결정 추진하지 못하고 4가지 안을 내놓았고, 이 걸 경사노위에서 논의해달라고 한 것인데, 경사노위도 결과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세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이죠. 논의의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중차대한 과제가 정부도, 사회적 대화 기구도, 그리고 지금 국회도 책임 있는 결정을 못한 채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중차대한 의제는 경사노위로 논의가 넘어오면서 공론화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지적은 상당히 숙고할 만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대화가 다방면으로 이뤄져야 할 빅딜 이슈입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비록 합의안이 안 나와도 이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이슈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자체가 이해의 폭이 넓혀져 후일 또 다른 대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공론화 축적 과정이 이뤄지지 못했어요.

신연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경사노위가 어떤 의제를 선정하거나 협의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의제를 끌어안아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보기에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핵심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과연 경사노위가 집중해야 될 과제인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데 국민연금은 일단 위원회가 종료됐으니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다른 주제에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김양수 물론 의견은 갈렸지만 다수 안으로 나왔고, 많은 계층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논의해서 그 의견을 정리해서 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창곤 국민연금이 경사노위가 감당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만, 경사노위에서 일단 논의가 시작됐으면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권고문이란 뭔가를 도출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에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김양수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층 대표들이나 중소기업 자영업 대표들 참석시키고 했는데, 그것들을 외연화해서 더 많은 공론화 부분은 부족했다는 건 저희도 생각할 만하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구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연금에 대한 경사노위의 결정과정과 결과물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논의하는 게 나쁘지 않았고, 특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 노사가 다 합의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할 텐데 이걸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지금의 논의 자체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지 않았고, 이런 논의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양수 이왕구 논설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회적 대화라는 게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은 후속논의로 이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또 너무 성급하게 다 답아서 한 번에 타결하자는 건 시대가 허용하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도 그렇고 ILO 협약 비준 문제도 노사관계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한 1년 논의해왔는데 올해 4월에 공약위원 입장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합의는 못했고, 공익위원 입장이 나왔고, 정부가 그걸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안 되면 무용한 거냐,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의견과 입장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 또는 공익위원이 입장이나 권고문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냐는 거죠. 합의가 아니면 성과가 없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자꾸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신연수 저도 꼭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협의하고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건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고, 이게 축적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논의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사노위도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합의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것을 중심을 가지고, 본위원회나 여기 실무자들이나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협의해서 끝낼 것, 그 다음에 합의까지 갈 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꼭 합의할 과제들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합의가 없으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과제 몇 개는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창곤 사회적 대화가 전가의 보도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협의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협의를 하면 합의하는 대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협의를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게 대화이니까요. 다만 이런 일반 논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를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의 논리가 되어선 또한 곤란합니다. 사회적 대화란 본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야 무용론 등이 나오지 않고 필요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문제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바람직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정책 의제가 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게 더 필요한 의제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협의를 앞세워 놓고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협의를 의

도적으로 가로막아 문제 해결을 결국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결정방식, 이른바 무결정이란 의사결정 방식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적 대화란 문제 해결이 아닌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나름의 일반 명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정치나 전략전술의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그래서 의제 선정부터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몰딜로 풀 의제가 있고, 빅딜의 의제도 있습니다. 대화의 우선순위와 집중해야 할 게 스몰딜인가, 빅딜인가 등에 대한 판단 또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왕구 워낙 관료적인 결정에, 효율을 중시하는 결정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시민들하고 논의가 됐느냐처럼 협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걸 충실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창곤 물론 경사노위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화를 온전히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실질적 주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기구, 즉 양대노동과 경총 등 사용자 단체입니다. 경사노위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경사노위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가 이 합의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입법화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사회적 대화의 효용입니다. 정부 또한 그 합의를 기준 삼아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탄근제처럼 더 악화된 형태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신연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그대로 가자 이걸 많이 강조하긴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만.

김양수 사실상 탄근제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국회가 존중해주고 실행해야 그게 쌓여서 대화와 합의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창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정치권이 왜 그러는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표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노동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합쳐서 조직률이 갓 10%대 남짓입니다. 사용자단체는 이 보다 대표성이 더 낮습니다. 프랑스처럼 그렇다고 노조의 조직률이 낮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의 인프라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또는 제도적 개선 없이 그냥 경사노위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알아서 합의를 이끌어 내보라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 것이지요. 또 합의를 해도 그에 대한 무게도 전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정부가 노조가입을 권유하고 독려한 역사가 있습니다. 노조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있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진정 사회적 대화를 중요시한다면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독려하고, 사용자단체 또한 대표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2기 사회적 대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김양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2기가 시작된 이후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10개의 의제, 업종별 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제 5개, 업종 5개, 총 10개 소위가 있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연구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양극화해소위원회입니다. 현재 양극화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연수 저는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 노조가 양보를 한다든가, SK이노베이션 사례처럼

대기업 노조가 양보해서 협력업체에 도움을 주는 식의 합의,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그만큼을 더 보태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합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노가 양보하고 사가 보태고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식의 대타협이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 몇 개 나와 줬으면 합니다.

이왕구 제가 보기에든 크게 원인과 해법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양극화는 99대 1의 문제가 아니라 80대 20의 문제입니다. 20에 해당하는 노는 노대로 양보를 해야 하는 거고, 사는 당연히 양보를 해야 하는 거죠. 서로 공격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창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입니다. 경사노위에서 양극화 의제를 다룬다는 건 개론을 다시 쓰자는 게 아니겠지요. 즉 일반론을 논하자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을 노사정이 다함께 찾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극화 양상이 소득에서 자산, 소비, 건강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저는 양극화의 핵심이자 노사가 직접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게 논의의 핵심 의제라고 봅니다. 노동시장에서 1차와 2차 사이의 임금 격차 완화,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와 각종 차별 및 처우 완화와 관련한 사회적 타협을 모색하는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냈으면 합니다. 더불어 궁극에는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지는 것일 테지요.

이런 논의가 잘 이뤄지면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난관을 풀어나가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한데, 이런 어려움을 혁신을 통해 돌파하고 새 성장 동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즉 성장과 혁신 그리고 복지, 다시 혁신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타트업 등 기업의 혁신은 성장을 위해선 필수적이며, 혁신이 없으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됩니다. 그런데 혁신은 성장통이 따르고, 이는 과정이죠. 낙오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안전망, 즉 복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뉴노멀이라고 할 장기적 저성장 상황의 도래 등 이른바 신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성장과 혁신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사이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노와사와 정부가 각각 뭘 해야 할지, 어떤 타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문제제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연수 다뤄야 할 의제들 가운데 이런 게 있겠죠. SK 이노베이션이나 우분투처럼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먼저 봉급 인상을 자제하겠다, 물가인상 분만큼만 하겠다, 나머지 이익을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주겠다, 하면 회사가 그만큼의 액수를 비정규직 노조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비용 구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자꾸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급 표준화 같은 것도 만드는 거죠. 자동차 쪽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일자리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봉급을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재교육시켜서 outplacement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정부는 어떻게 하고 노조는 거기에 대해서 재교육이나 outplacement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대해서도 역시 표준안이나 권고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연수 동아일보 non설위원

김양수 임금문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그리고 노동이사제 등 투명경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 인식과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대로 1년에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논의를 해나가고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곤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우분투재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재단은 제2금융권 노사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양극화 해소의 가치를 내걸고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활동에서 보듯이 노사가 호혜적 감정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불신을 낮춰주는 등 효과가 큼니다.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해주는 경험이기도 하죠.

우분투재단 외에도, 공공상생연대기금, 제1금융권 노사가 마련한 금융산업공익재단 등도 주목할 만한 합니다. 노조 또는 노사가 마련한 이런 재단들이 속속 생겨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경험은 노사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상생형 일자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형에서 군산형, 대구형, 구미형 등 곳곳에서 이뤄지는데, 이 또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비록 이런저런 한계가 있지만,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북돋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기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위원회가 마련됐다고 하니 기대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가치,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양극화 해소 문제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걸 선도해야하는 이유죠. 또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노동이사제 정도는 모두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좋겠어요.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건 경영진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하길 바랍니다.

- 김양수**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왕구** 1기가 아쉬웠던 점으로 너무 주제가 많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신연수** 저는 공공부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성하고 사회적 책임은 반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노사 상생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굉장히 투명하고 노사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을 공공기관부터 만들어서 그걸 전파하는 역할을 공공위원회에서 많이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곤** 어떤 정책이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말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노동연구원에서 사회적 대화 인지도를 2018년 말 조사했는데,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의 위기와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전체의 43.8%로 나타났고,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은 12.6%에 그쳤지요. 판단을 잘 못 내리겠다는 보통 의견이 43.3%에 이르렀지요. 이는 사회적 대화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회적 대화 사전 인지도 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10.9%,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는 무려 63.1%, 전혀 모른다는 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결과로 보면 모른다는 응답이 많죠. 어떤 정책 결정이든 그게 좀 더 힘을 받으려면 일반 시민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연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전 사회적으로 지역별, 분야별로 확산시키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창곤** 모든 정책과정은 공론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접촉하고 알리고, 직접 발로 뛰며 지역별, 기업별, 산별의 사회적 대화가 가동돼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만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노사의 대표성이 분명하고 높아야 합니다. 경사노위가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

라를 구축하는 데도 힘써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공감은 물론 참여와 인식을 넓히는 데도 애써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지지를 넓혀야 합니다.

김양수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의제별 위원회만 많고 업종별 위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역점을 두고 업종별 위원회를 5개 띄우고 앞으로 업종별로 고유한 것을 논의해가려고 합니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곤 경사노위 2기에는 이처럼 사회적 대화의 여건과 기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민주노총이 비록 불참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에 매우 관심이 큼니다. 민주노총과의 대화 채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계로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속해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노동계 안에서 협력과 연대가 충분히 깊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요. 민주노총의 여러 사정을 살피고, 결코 상대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여겨선 곤란합니다. 경사노위 밖의 대화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연수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되고 대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건 좋은데, 위원회 자체가 별로 성과도 없이 계속 위원회만 늘어나면, 그래서 공무원 철밥통만 늘린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결코 국민들이 좋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김양수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이 경자년 쥐띠해인데 쥐는 부지런함, 인내를 상징하고 풍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해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풍요롭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그 힘으로 저희 위원회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양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력홍보팀장